

# 여 “인화학교 비극 청와대도 책임” 야 “대통령 측근비리 왜 수사않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국회의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영화 ‘도가니’로 불거진 장애아동 인권 침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이어갔으며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대정부질의를 통해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국민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뒤늦게 조치들을 발표한 것이 답답하다”며 “정부의 늦장 대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조전혁 의원은 “인화학교의 비극과 관련해 종합백서를 꼭 발간해야 한다”면서 “교학의 실무담당자, 실무교육청공무원, 검찰과 경찰, 법원,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 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올해 들어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김두우 전 흥보수석 등이 구속됐고, 신 전 차관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하

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기준 의원은 “측근 비리가 줄줄이 터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며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고 가세했다.

창조한국당 유효민 의원은 “검찰이 신 전 차관을 수사하지 않고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암투병 중인 형과 친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이 회장의 입을 막고 협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박기준 의원은 지난 해 9월 중부고속도로 납이천IC 신설 사업 허가와 관련,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수차례 불가 판정을 받다가 지

난해 불과 1주일 만에 허가가 났다”며 “이 IC에서 5분 거리에 이 대통령 선영과 형님 이상득 의원 소유의 영 일울봉북장이 있다”고 특혜 가능성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범야권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박 후보가 단국대를 다닌 1979년~1985년은 사법연수원·검사 재직 시와 겹친다. 당시 대구에서 검사 생활을 한 만큼 박 후보는 사실상 5학기만에 졸업을 한 선”이라며 “조기 졸업 제도도 없었고, 공부의 산이라고 해도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네가 서울의 희망” 박원순 서울시장 애원 단일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흥은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공연을 본 뒤 한 어린이를 안아보고 있다.

“범여권 세 결집”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8·24 서울시민의 힘’ 출범식에서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 건립용으로 내곡동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과장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또한, 내곡동 부지 인근에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이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론하고 대통령 선영 인근 고속도로에 나들목(IC)을 신설하게 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아들이 공시지가

## 青, 내곡동 사저 경호동 축소 검토

### 민주, 부지 매입 해명·진상규명 요구

민주당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 건립용으로 내곡동 부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과장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또한, 내곡동 부지 인근에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이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론하고 대통령 선영 인근 고속도로에 나들목(IC)을 신설하게 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아들이 공시지가

보다 싸게 사고 국가는 3배로 샀다고 하면 대통령 아들의 부담을 국가가 떠받든 것 아니냐”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수나 흰수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경호처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지매입 대금을 지원한 의혹을 제기한 이용섭 대변인은 시형씨의 취득세 탈루 의혹과 증여세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3.3㎡(1평)당 매입가격을 살펴보면 시형씨는 800만원인데 대통령실은 2천96

만원으로 동일지번 동일토지에서 이 중가격 거래가 이뤄졌다”며 “자자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서 충당해준 의혹이 있다”고 대통령실의 배임죄 위반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격이 공시지 가보다 낮을 경우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며 “시형씨는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샀음에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100% 취득세 탈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비례대표)이 12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MB) 정부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와 호남 중소기업 도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을 몰아붙여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부처, 공기업의 인사는 TK(대구·경북), 고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호남 차별인사는 도를 넘었으며, 호남의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도산돼 지역경제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말문을 연 뒤 김황식 총리를 향해 “권력기관장인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국세청장을 TK출신이고 경찰총장, 경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 일 뿐 아니라 MB정부 100대 요직

## 오늘부터 공식선거운동…여야 격돌

한나라 “박, 병역문제 계속 거짓말”…네거티브 공세

민주, 여성·맞벌이 부부 표심잡기 등 정책행보 치중

10·26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2일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한나라당은 상대 후보를 향해 파악적인 네거티브 공세를 편 반면 애원은 정책 행보에 치중했다.

한나라당 흥준표 대표는 박 후보의 병역논란과 관련,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에는 1936년에 행방불명이 됐다. 일본에 강제징용에 간 사실이 없는 것”이라며 “박 후보 측에서 계속 병역관계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억울한 장병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요지의 박 후보 발언을 문제삼으며 “북한을 두둔하는 밭언을 하는 사람에게 서울시장을 내줄 수 없고, 내줘서도 안 된다”며 “색깔공세”를 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제보에 의하면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에게 딸이 있었는데 1936년~1937년경 사할린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며 “제보가 사실이라면 작은할아버지의 딸이 태어나기 이전 사할린에 가 있었다는 얘기로, 1941년 형님에게 나온 영장을 자신이 대신 이행하기 위해 사할린에 강제

징용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 애원 단일후보는 이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과 맞벌이 부부에 대한 표심잡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오전 서대문구 흥은어린이집을 방문, 국립공립보육시설 확대와 보육교사 채용 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는 “동별로 2개 이상 국립공립보육시설을 확보하고 보육교사의 신분 불안과 낮은급여 문제를 해결해 보육에 대한 열정을 높이겠다”며 “우리 사회는 이미 보편적 복지 시대로 가고 있다. 복지를 보유·교육·주택 등으로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MB 호남검찰 차별…요직 한명도 없다”

해남출신 민주당 김학재 의원 영남면중인사 집중 추궁



해남 출신의 민주당 김학재 의원(비례대표)이 12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MB) 정부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와 호남 중소기업 도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을 몰아붙여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부처, 공기업의 인사는 TK(대구·경북), 고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호남 차별인사는 도를 넘었으며, 호남의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도산돼 지역경제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말문을 연 뒤 김황식 총리를 향해 “권력기관장인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국세청장을 TK출신이고 경찰총장, 경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 일 뿐 아니라 MB정부 100대 요직

들의 씨가 마를 지경”이라며 “이렇게 호남출신 간부들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세웠다.

또 김 의원은 김 총리에게 “광주·전남 지역에는 중형건설업체 대부분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며 호남기업들 상당수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도산됐다”며 “어려운 처지에 빠진 호남 기업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실 방안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8대 요직인 법무부장관·차관·검찰총장·대검찰장·서울중앙지검장·검찰국장·대검증수부장·공안부장 등 여덟 자리에 호남 출신이 한 사람도 없다”며 “군사정권 때도 요직 중 1~2자리 정도는 호남에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사장으로 승진한 8명 중에, 또 고검장급 9명 중에 호남 출신은 한 사람이다. 호남출신

人们的 씨가 마를 지경”이라며 “이렇게 호남출신 간부들을 차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세웠다.

장 의원은 김 총리에게 “광주·전남 지역에는 중형건설업체 대부분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며 호남기업들 상당수가 세무조사를 받거나 도산됐다”며 “어려운 처지에 빠진 호남 기업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실 방안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유림을 사유화하는 것은 전부당부당하다”며 “백운산과 지리산 화학림은 서울대에 넘길 게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해서 영구보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당 ‘옥매트 횡령’ 윤석용 고발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비례대표)이 12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MB) 정부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와 호남 중소기업 도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을 몰아붙여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부처, 공기업의 인사는 TK(대구·경북), 고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호남 차별인사는 도를 넘었으며, 호남의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도산돼 지역경제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말문을 연 뒤 김황식 총리를 향해 “권력기관장인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국세청장을 TK출신이고 경찰총장, 경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 일 뿐 아니라 MB정부 100대 요직

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비례대표)이 12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MB) 정부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와 호남 중소기업 도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을 몰아붙여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부처, 공기업의 인사는 TK(대구·경북), 고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호남 차별인사는 도를 넘었으며, 호남의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도산돼 지역경제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말문을 연 뒤 김황식 총리를 향해 “권력기관장인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국세청장을 TK출신이고 경찰총장, 경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 일 뿐 아니라 MB정부 100대 요직

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비례대표)이 12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MB) 정부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와 호남 중소기업 도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을 몰아붙여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부처, 공기업의 인사는 TK(대구·경북), 고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호남 차별인사는 도를 넘었으며, 호남의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도산돼 지역경제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말문을 연 뒤 김황식 총리를 향해 “권력기관장인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국세청장을 TK출신이고 경찰총장, 경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 일 뿐 아니라 MB정부 100대 요직

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비례대표)이 12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MB) 정부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와 호남 중소기업 도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을 몰아붙여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부처, 공기업의 인사는 TK(대구·경북), 고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호남 차별인사는 도를 넘었으며, 호남의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도산돼 지역경제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말문을 연 뒤 김황식 총리를 향해 “권력기관장인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국세청장을 TK출신이고 경찰총장, 경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 일 뿐 아니라 MB정부 100대 요직

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비례대표)이 12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MB) 정부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와 호남 중소기업 도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을 몰아붙여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부처, 공기업의 인사는 TK(대구·경북), 고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호남 차별인사는 도를 넘었으며, 호남의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도산돼 지역경제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말문을 연 뒤 김황식 총리를 향해 “권력기관장인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국세청장을 TK출신이고 경찰총장, 경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 일 뿐 아니라 MB정부 100대 요직

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비례대표)이 12일 교육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MB) 정부에서의 호남 차별 인사와 호남 중소기업 도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국무총리와 법무장관을 몰아붙여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부처, 공기업의 인사는 TK(대구·경북), 고대 출신이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고 호남 차별인사는 도를 넘었으며, 호남의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도산돼 지역경제가 위험한 상황”이라며 말문을 연 뒤 김황식 총리를 향해 “권력기관장인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 국세청장을 TK출신이고 경찰총장, 경찰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 일